

데스크 시각



채희중 사회부장 겸 편집국장

새해 첫날이면 늘 해맞이를 했던 무등산을 못 오르지 이태가 됐다. 악귀 같은 '코로나19' 탓이다. 신년 아침에 마땅할 할 일을 찾지 못하던 참에, 불현듯 호랑이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가 바로 '호랑이해' 아닌가. 가족과 함께 동물원으로 향했다. 마친 우치동물원은 집에서 3~4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영물의 영험한 기를 받을 요량이었지만, 호랑이는 누워서 쭈뼛 움직이지 않더니 얼마 안 있어 우리로 들어가 버렸다. 비록 호랑이 얼굴을 '영접'한 시간은 짧았지만,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 웃는 날이 많은 1년이 되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호환, 하늘의 징별로 여겼다

옛사람들의 관념 속에 호랑이는 산의 주인인 산군(山君)이자 산신령이었다. 때론 부처나 신의 사자로 여겨졌다. 호랑이는 한민족에게 오랜 세월 신수(神獸)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영토의 모형을 호랑이로 그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현대에 와서 호랑이는 88올림픽 마스코트를 거쳐 육군의 마스코트로도 사랑받고 있다.

은편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7만 명이다. 2019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5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해 40년 후에는 약 3900만 명으로 예상된다. 40년 전 인구 수준이다. 또한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증가하여 총인구의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 비율이 10.8%에서 15.7%로 증가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 의료비는 40% 정도 증가했다. 몇 년 후의 초고령사회에서는 지난 10년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 의료보험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안전성 확보에 의료보험 재정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어 비수도권의 의료 체계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는

2022년, '호랑이 물어갈 놈들'

하지만 현실에서 호랑이는 가족은 물론 사람까지 다치는 대로 잡아먹는 맹수의 왕이었다. 그래서 과거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호환(虎患)은 흔히 일어나는 재난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호환을 불효하거나 조상 모시기를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하늘의 징벌로 여기기도 했으니, 양반 집안에서 이를 최고의 치욕으로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시대 호환은 지역을 불분하고 나타나는데, 진도 등 섬 지역에서도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동물임에도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가을과 겨울 두 계절에 걸쳐 호환(虎患)으로 죽은 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호환이 자주 발생한 지역의 관리는 파직되거나 곤장을 맞았다는 내용도 많이 보인다. 오죽했으면 세종 임금이 호랑이 사냥만을 전담하는 착오갑사(捉虎甲士)라는 부대까지 만들었겠는가.

용에 비견될 만큼 신격화된 호랑이는 옛 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연암 박지원의 한문 단편소설 '호질(虎叱)'이 대표적이다. 물론 소설의 주제는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부조리를 꿰뚫고 있지만 말이다. '호질'이란 말은 '범의 호통' '범의 꾸짖음'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소설 속에서 호랑이는 창귀라고 부르는 귀신 수하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범에게 잡아 먹힌 뒤 사람에서 귀신이 된 새 창귀는 각기 역할이 다르다. 심부름하는 귀신, 못이나 함정 등 호랑이에게 위험이 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해 주는 귀신, 먹잇감을 불러들이는 귀신이 있다.

어느 날 창귀로부터 선비를 먹잇감으로 추천받은 범

이 마을로 내려온다. "대저 제 것 아닌 물건에 손을 대는 놈을 일러 도적놈이라 하고, 살아 있는 것을 잔인하게 대하고 사물에 해를 끼치는 놈을 화적놈이라고 하느니라. 네놈들은 밤낮을 쏘다니며 분주하게 팔뚝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남의 것을 훔치고 뉘아쳐려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심한 놈은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출세를 위해 마누라까지 파는 세상이니 삼강오륜을 더 이야기할 나위가 있겠느냐?" 범이 위선에 가득한 선비를 코앞에서 호통치는 장면이다. 240년 전 '범의 꾸짖음' 이 지금까지도 유효함이 신기할 따름이다.

온갖 몹쓸 것들 잡아갔으면

소설 속 호랑이의 호통처럼 21세기에 범이 내려온다면 누구부터 잡아먹을까? 그 대상이 어찌 한물일까 마는, 오직 돈밖에 몰라 이윤을 쟁기느라 발생한 '안전 사고'라는 놈만큼은 반드시 물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69명-71명-68명-72명-68명,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수이다. 매년 70명이 산업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으니, 오로지 돈을 좇아 안전을 도외시한 그들 공사 관계자들도 호랑이 앞에 세우고 싶다. 아울러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사주로 여기는 꼴뿔들도 물어 갔으면 좋겠다. 세상의 온갖 몹쓸 것들, 그중에 오미크론만큼은 꼭 물어가기. 그래서 하루빨리 심간 편한 세상이 오기를.

대통령 선거 의료 정책 제안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때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행정구역과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질병 치료 중심의 현 의료 전달 체계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치료, 요양, 돌봄을 통합하여 생애 전주기를 관리하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의료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규모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통합적 의료 체계가 필요하다.

'필수 의료'란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치료가 지연되었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 영역이다. 보편적으로 응급, 외상, 심뇌혈관, 중환자, 분만, 감염병 등을 필수 의료로 분류한다. 지난 4월 2025년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개선을 발표했다.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해 필수 의료, 감염병, 지역 책임 병원을 위한 5000병상 확보가 주된 내용이다. 사업 전체 예산은 4조 7000억 원이다.

하지만 2016년 1차 기본계획과 큰 차이가 없고 병상 확보에만 치우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필수 의료, 공공 의료의 지금까지 병상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힘들고, 위험하며, 장래성이 낮아서 그렇다. 수가의 재산정, 불가피한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등의 대책과 함께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먼저이다.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 2020년 모집된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총 수련 비용은 1900억 정도로 추정된다. 국가 부담이 필요하다. 국립 대학 병원의 공익 의료 기능을 강화해 희귀 난치 질환 등 특정 질환의 진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진료, 감염병 대비 인프라 구축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필수·공공 의료의 중심인 보건복지부는 복지에 치우친 예산과 인력으로 감염병, 기후, 환경 위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독립적,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보건과 복지의 전문성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부가 분리되어야 한다. OECD 회원국 38개 중 23개국이 보건과 복지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필수 의료·공공 의료·지역의료의 활성화, 감염병 기후 환경 위기 대응,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의의 미래이다.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고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고

재난이란 무엇인가

나 천재지변이 재난이다. 과연 재난은 언제나 계획 바깥에서, 미리 생각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사람 중 누구도 배의 침몰을 생각하지 못했다.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의 사람들도 비행기의 돌진을 예상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전 지구적 재난 사태를 상상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도, 대학살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희생된 사람들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뿐인데. 재난이란 불운의 결과인가. 하필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서, 예컨대 기후 위기가 심각한 이 시대에 태어나서 호주 산불과 같은 재난적 사태를 겪는 것일까.

재난이 언제나 불가항력의 사건이라면 인간에게 남은 것은 운명적 순응밖에 없다. 마치 신이 존재했던 먼 과거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비는 줄도 모를 무력한 마음으로 재난이 피해가기만을 바라는 게 인간의 몫이다. 그러나 기술과학의 획기적 발전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를 단순한 불운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우선 현대 사회의 재난은 대개 기술 문명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 붕괴, 가스 폭발, 방사능 유출, 배의 침몰 등은 설비나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설계나 지침을 명확히 따르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9·11 이후 항공기 조종실은 조종사와 허기받은 객실 승무원 이외의 출입이 불가하게 되었다. 자연 재난 역시 관리의 영역에 있다. 지진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해 댐을 건설할 수 있다. 자연 발화로 인한 산불의 예방은 불가능하나 화재 진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난에 대비한 방재 활동의 한계다. 똑같은 홍수나 가뭄,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겪어도 피해는 동일하지 않다. 경제 활동과 권력이 밀집된 곳은 피해가 적거나 복구가 빠르다. 원자력 발전소는 서울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는 의료 환경의 격차에 따라 치사 가능성을 달리한다. 우리는 재난 피해가 집중되는 곳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야 한다. 재난은 경제적 정치적 문제이고, 법의 문제다. 달리 말해 사회의 정의 문제이자 윤리적 분배의 문제다. 우리가 누리는 안전은 어딘가의 불안전을 대가로 얻은 이익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정말 큰 지혜다. 그레도 기술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와 대비하는 삶의 고단함과 지루함, 막막함은 부기하고 싶다. 결국 모든 걸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주선 조선대 부설연구소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재난은 인간에게 끔찍하고 막대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 전쟁, 학살, 홍수, 가뭄, 지진, 쓰나미, 산사태는 물론 건물 붕괴나 각종 폭발, 방사능 유출, 세월호 사건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절망과 파탄으로 몰고 간다. 최근 유행 중인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생명을 위한 보건 조치 속에서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했고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이 속출했다. 우리 시대의 재난은 자연재해와 문명이 만들어 낸 재해까지 더해진 상태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건의 원인과 피해 규모, 사회적 의미는 모두 다르다. 가령 세월호 사건과 펜데믹의 세부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재난적 사건의 공통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사전에서 정의하는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다. 누구도 바라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변고

社說

'콩가루 선대위' 국민의힘 새판 짤 수 있을까

'혼선' '갈등' '난파선' '지리멸렬' '공중분해'. 대선을 두어 달 앞두고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멈추기 위한 극약처방이 나왔다. 선대위 전면 해체와 의원 전원 당직 사퇴 선언이 그것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여섯 명의 총괄본부장 등 선대위 지도부 대부분이 사퇴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새시대준비위원장도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사퇴 대상에 포함했다가 선대위가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충격 요법을 내놓은 것은 윤석열 후보의 잇따른 실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약 1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윤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 준 것은 문재인 정부 비판 외에는 말실수밖에 없었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선대위 개편을 선언한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주는 대로 연기만 좀 해 달라"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가 아바타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실수를 줄이는 것이 절박했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의 일괄 사퇴가 어떤 배경에서 결행된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등이 요구한 '선대위 재구성'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선대위를 '친위 체제'로 재편하려는 윤 후보 쪽의 정치 작업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윤 후보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수권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선대위 개편의 실효성은 그만큼 반감될 것이다.

크게 늘어난 청소년 '코로나 블루' 대책 마련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남 지역 청소년들의 절망가량이 짜증과 불안 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우울증을 호소한 청소년들은 코로나 발생 첫 해인 전년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2021년 전라남도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조사에서 전남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5531명에게 코로나로 인한 심리·정서를 묻은 결과 47.1%가 짜증, 46.6%는 불안·걱정, 23.2%는 화·분노, 22.5%는 두려움을 각각 꼽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우울함을 느낀 비율은 지난해 19.0%로, 2020년의 9.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5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청소년 중 22%가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7.3%는 실제로 자살을

계획하고, 3.5%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1회 이상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청소년도 2.5%에 달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이 보여 준다. 일상생활은 물론 대면 수업이 힘들어지고 정서적 교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부정적 감정을 친구들과 소통을 통해 해소하고 싶어도 거리 두기로 인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無等鼓

차기 대통령 선거가 극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너도나도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말한다. 비호감(非好感)의 사전적 의미는 얼굴이 못생겼거나 유별난 성격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대선 판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외모나 성격 등의 문제를 일컫는 것은 아닐 터이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적 스캔들과 각종 의혹 사건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잃고 있는 점을 비호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선이 아니라 차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는 자조 섞인 소리까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 재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를 밀도는 지지율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심판 여론에 크게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이번 대선이 전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란 평가를 실감하게 된다. 물론 앞선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들에 대한 호감

과 비호감이 극명하게 나뉘곤 했다. 유권자 모두에게 지지를 얻는 후보는 없었기 때문이다.

호감과 비호감은 객관적이 아닌 개개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어떤 후보든 유권자 성향별로 호감도를 갖게 되고 이는 투표로 이어지게 된다. 과거 치러졌던 대선에서 비호감 없이 당선된 후보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굳이 '비호감 대선'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문제는 후보 간 극한 네거티브 공방인데, 이게 비호감

을 더욱 굳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정치 혐오와 냉소로 이어지고

투표를 또한 떨어질 것이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 등 국가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데 국민이 의뢰하는 대선이 이뤄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제 대선이 두 달 남았다. 정권과 대선 후보들은 남은 기간 민생과 국가 비전 및 정책을 도외시한 막장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가치가 대결하는 대선 경쟁 무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비호감 대선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